

한미FTA 반대 집회 참가자 출두 요구 삼성 X파일 폭로 노회찬 의원 기소 국가보안법 이용 마녀사냥 확대

탄압을 중단하라

» 관련기사 3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한미FTA 반대 운동 탄압에 반격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 반대 운동을 계속 공격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찰은 이미 1백여 명에게 출두요구서를 발부했고 이 숫자는 3백여 명으로 늘어날 듯하다고 한다. 출두요구서 대상에는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 지도부뿐 아니라 단순 참가자도 포함돼 있고, 단지 최근 집회 참가자가 아니라 지난해 11월 집회 참가자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6월 말에 집중될 한미FTA 반대 투쟁의 예봉을 꺾기 위해 야금야금 공격을 가하고 있다. 한미FTA 반대 운동이 강력하더라도 정부의 이런 ‘짹’을 자주 맞는다면, 충격과 피로가 누적돼 운동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범국민이 정부의 공격에 소심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범국민은 사법처리 대상자들이 개인적으로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것을 방지하지 말고, 강력한 항의와 공동 대응을 조직해야 한다.

한미FTA 저지 운동을 확대하고 6월 말로 예정된 투쟁을 강력하게 펼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짹’에 강력하게 반격할 필요가 있다.

‘떡값 검찰’은 노회찬 의원 기소를 철회하라

지난 21일 검찰은 노회찬 의원을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회찬 의원이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 때 삼성에게서 돈을 받은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게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노회찬 의원의 ‘떡값 검사’ 폭로는 정당했다. 삼성이 대놓고 온갖 불법 행위를 일삼아도 처벌받지 않은 데는 ‘삼성 장학생’들인 검사들의 공이 컸다는 것을 밝혔을 뿐이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부패한 유착을 끊기는커녕 어처구니없게도 노회찬 의원을 기소했다.

당시 ‘떡값 검사’로 지목된 자들이 주축이 된 서울변호사회는 X파일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관음증 환자나 파파라치 양성소로 만드는 것”이라고 우겼다.

이번에도 검찰은 노회찬 의원의 폭로가 “[떡값의] 전달·배포에 관한 계획이지, 계획대로 지급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동 횡설수설했다.

‘떡값 검사’들이 “계획대로” 떡값을 받았는지는 이견희와 홍석현, ‘떡값 검사’들을 소환해 조사하면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고 적반하장격으로 노회찬 의원을 기소함으로써 자신들이 이견희의 하수인이며 부정 부패의 옹호자임을 증명한 것이다.

최근 경찰과 검찰은 한미FTA 반대 집회 참가자들을 탄압하고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마녀사냥을 강화했다. 이는 한미FTA 저지 운동 등을 위축시키기 위한 저들의 공격이다. 노회찬 의원 기소도 이 연장선에 있다. 대선을 앞두고 자행하는 “민주노동당 탄압”(권영길 의원)이기도 하다.

따라서 강력한 반격으로 저들의 공격을 좌절시켜야 한다.

처벌받아야 할 자들은 이견희, 홍석현, ‘떡값 검사’들이다. 검찰은 노회찬 의원 기소를 당장 철회하라.

허세욱 열사 49재 및 한미FTA 전면 무효화 총궐기 선포 결의대회

일시: 6월 2일(토) 오후 3시 | 장소: 서울 대학로(가안)
주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한미FTA와 반대 운동

— 재협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 한미FTA 반대 운동 건설의 모범들

3, 5면

자이툰 장교 사망 사건 —

자이툰은

당장 철군하라

2면

차베스와 21세기 사회주의
‘민중권력’의 부활

4면



일본 맑스주의자가 말하는
아베 정권의 개헌 추진

7면

존 몰리뉴 칼럼
— 연속혁명론

9면

비정규직 악법
시행령과 노동자 투쟁

12면

더 큰 비극이 벌어지기 전에 당장 철군하라

김용민

반전 운동이 누누이 경고해 온 비극이 다시 벌어졌다.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오 모 중위는 이라크에 파병된 지 한 달도 채 안 돼 싸늘한 시체가 됐다.

정부가 관련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탓에 오 중위 사망의 진상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진상이 무엇이든 오 중위의 죽음은 노무현 정부가 부시의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돕기 위해 이라크 파병을 시작할 때부터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안전하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자이툰 부대는 이미 몇 차례나 위험천만한 공격을 받은 바 있다. 2004년 10월에는 부대 영내에 로켓포탄이 떨어졌고, 아르빌 시내를 순찰하던 자이툰 부대원이 수류탄과 소총 공격을 받았다는 증언도 있었다.

최근 몇 달 사이 자이툰이 주둔하는 쿠르드 지역의 불안정이 크게 고조되면서 이러한 위험은 훨씬 더 커졌다. 지난 5월 9일에는 아르빌에서 차량폭탄 공격으로 최소 15명이 사망했고, 나흘 뒤인 5월 13일에는 아르빌에서 남쪽으로 50킬로미터 떨어진 마크무르에서 트럭을 이용한 자살 폭탄 공격이 발생해 최소 50명이 죽고 1백15명이 부상했다.

악몽

쿠르드 지역의 불안정 심화는 미국의 점령 정책이 낳은 결과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 전쟁 시작 때부터 부패한 쿠르드족 지도자들을 침략과 점령에 이용해 왔고, 이들은 지금 이라크 북부 지역에 매장된 석유를 독차지하기 위해 쿠르드 자치지역에서 야비한 ‘인종 청소’를 벌이고 있다.

특히 최근 쿠르드족 지도자들이 미군의 바그다드 ‘안정화’ 계획을 돕기 위해 쿠르드 자치정부 소속 군대를 바그다드에 파견하기로 하면서 쿠르드 자치정부에 대한 이라크인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최근 쿠르드 자치정부나 쿠르드족 정당들에 대한 공격이 급증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최근 바그다드에서 돌아온 전 이라크 대사 장기호는 이라크를 “죽음과 공포가 혼재하는 블랙홀”로 묘사했다. 그는 “삼엄한 전시 요새” 같은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공관원들조차 “테러리스트들에게 납

치돼 탈출하려고 애쓰다 결국 테러범 총에 맞아 죽는 악몽에 시달리곤 [한다]”고도 했다.

아르빌의 자이툰 부대원들이 느낄 위협과 스트레스도 결코 이에 못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부대 안에서조차 방탄조끼를 입고 지내야 한다. 그리고 이처럼 극도의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만연한 상황에서는 어떤 비극도 벌어질 수 있다. 이라크에

자이툰 부대가 미군의 풀마니 노릇을 하는 쿠르드족 민병대원들에게 군사훈련 수료증을 주고 있다

파병된 미군의 자살율과 총기사고 건수는 미군 전체 평균치보다 월등히 높다.

부시의 학살과 점령을 지원하는 이라크 파병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고, 노무현의 가장 추악한 범죄 중 하나였다. 그러나 지난 연말 ‘2007년 내 임무 종결’ 운운하며 파병 재연장 꿈을 부렸던 노무현 정부는 이제 ‘임무 종결 계획’은커녕 “1년 재연장”을 들먹이고 있다.

심지어 자이툰 부대가 철수한 뒤에도 이라크 진출 기업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거나 한·미 연합 ‘지역재건팀(PRT)’ 형태로 이라크 장기 주둔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오는 7월에는 레바논에 ‘진짜’ 전투병을 파병할 예정이다.

오 중위가 사망한 19일에도 노무현은 “[이라크 파병을] 애써 변명은 하지 않겠다. … [그러나 자이툰이] 이라크 국민에게 사랑받고 있는 것은 참 다행”이라며 역겨운 헛소리를 늘어냈다.

오 중위의 죽음과 같은 비극이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더 큰 비극이 벌어질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자이툰 부대는 당장 돌아와야 한다.

2004년 10월 자이툰 부대를 방문한 린스펠드 - 자이툰은 미국의 제국주의 전쟁을 돕는 구실을 하고 있다

“인용해도 될까요?”

“[김승연 구속의] 안타까운 현실 … 사실 부정(父情)은 기특하다. 정상참작 여자가 조금 있다.”

- 법무부장관 김성호

“한나라당 후보가 참여정부 주요 정책 중에

서 안 하겠다고 부정할 정책이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다.”

- 노무현

“지구 반대편에서 같은 보수의 가치와 실용주의 정책을 내걸고 있는 정신적 동지에게 축하 드린다.”

- 사르코지에게 보낸 이명박의 축전

“잘 되는 집안은 형제가 싸우다가도 강도가

들어오면 싸움을 멈추는데, 망하는 집은 계속 싸운다.”

- 이명박의 푸념

“이 전 시장이 진짜 한물간 사람이다 … 그가 쓰는 언어는 천박하고, 그 입은 경박하며 소외된 계층에는 야박하여 이러다가 진짜 쪽박을 차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든다.

- 박사모 대변인 논평

‘안전하다’?

지난 4년 동안 노무현 정부가 거듭해 온 거짓말과 달리 자이툰 부대원들의 신변은 결코 ‘안전’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한겨레21〉은 자이툰 부대 근무 경험이 있는 장교와 사병 30여 명을 취재해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에 배치된 2004년 9월부터 2006년 초까지 자이툰을 겨냥한 공격이 몇 차례나 있었음을 폭로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2004년 10월 27일에는 자이툰 부대 정문에서 겨우 8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박격포 공격이 있었고, 2005년 5월 29일에는 자이툰 부대를 향해 6발의 로켓포 공격이 벌어져 이 중 2발이 영내에 떨어졌다. 인터뷰에 응한 한 사병은 “이날 처음 전쟁터에 왔구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인터뷰에 응한 자이툰 근무 병사들은 “아르빌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라크 저항세력의 핵심 조직원이 자이툰 부대에서 통역요원으로 활동했고 부대원들의 음식물에 독극물을 넣으려 했다”고 증언했다.

저항세력의 공격이라는 위험 외에도 극도의 불안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종종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총기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병사들에 따르면, 특전사 소속 한 부사관이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나머지 다른 부사관들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정부는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데만 열을 올렸다. 심지어 노무현이 자이툰을 방문하기 전날인 2004년 12월 7일 발생한 총기 사건 — 쿠르드족 민병대원 한 명이 사망했다 — 은 아예 녁 달 동안 숨기기까지 했다.

‘평화·재건 지원’?

지난 4년 동안 자이툰 부대가 해 온 일도 ‘평화·재건’과 한참 거리가 멀다.

지난해 9월 파병반대의원모임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라크를 방문했을 때 쿠르드 자치정부의 내무부 장관 카림 산자리는 “자이툰 부대가 ‘제르바니’ 등 쿠르드 민병대와 경찰에게 사격술과 전술훈련, 범죄수사 기법 교육은 물론 지문감식 기구, 컴퓨터, 차량, 검문과 방호시설 구축도 지원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연말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이 폭로한 바에 따르면,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주둔 명분은 재건 지원이지만 정작 재건 지원 비용은 주둔 비용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그나마 “재건 예산의 상당 부분은 쿠르드 민병대와 정보 조직에 대한 사실상의 군사적 원조에 사용되고 있다.” ‘평화·재건’ 지원한다더니 미군 풀마니들의 무장과 훈련을 도와 온 것이다.

파병은 위기에 처한 부시의 점령 정책을 돕고, 이를 통해 남한 지배자들도 나름의 떡고물을 챙기기 위한 것일 뿐이다. 이라크의 ‘평화·재건’은 모든 외국군이 이라크 땅을 떠날 때 시작될 수 있다.

한미FTA 무효화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미국 정부와 민주당 주도 의회가 노동·환경 기준 강화를 빌미로 한미FTA 재협상을 들먹이는 것은 완전한 위선이다.

한미FTA의 본질은 오로지 기업 이윤만을 위한 ‘노동권·환경권 파괴 협정’이다. 따라서 한미FTA 협정에 노동·환경 기준 강화가 포함되더라도 이는 공문구가 될 것이다. 미국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준수를 요구하지만, 미국 정부 자신도 ILO 노동기준 중 ‘고용과 직업에서 차별 금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에 관한 조항’을 비준하지 않았다. 환경 문제에서도 미국 정부는 온실가스를 제한하는 교토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죽하면 한미FTA에 적극 찬성해 온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 최병일마저 “재협상 요구는 반칙이며 … 미국 내에서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준을 외국에 강요하는 위선적 행위”라고 비판할 정도다.

“오십보 백보 논쟁”

‘신통상정책’을 통과시킨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노동과 환경뿐 아니라 자동차·제조업·농업·서비스 분야에서도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해, 이들이 실제로 노리는 것은 다른 데 있음을 보여 줬다.

물론 한국 정부도 노동자 탄압과 환경 파괴에서는 미국에 뒤지지 않는다. 민주노총의 지적처럼 이들의 다름은 “오십보 백보 논쟁”일 뿐이다. 또, “노동권과 환경권은 재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한미 양국이 즉각 보장해야 할 기본권”인 것이다.

미국은 노동·환경 기준 강화 운운하지만 한미FTA의 본질은 ‘노동권·환경권 파괴 협정’이다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은 국내에서 복잡한 반응을 낳고 있다. 한국의 일부 지배자들은 ‘재협상’이 한미FTA 반대 여론을 부추기고 체결과 비준 일정에 차질을 줄까 봐 걱정이다.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은 주한미대사 버시바우에게 “재협상은 반미 감정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도 “다시 한 번 FTA 찬반과 반미 운동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겠다는 말이[나]”며 “미국의 부담을

한국의 어깨에 떠밀어 지우는 순간 한미FTA 자체가 주저앉고 말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미국 의회 비준을 고려해서 한미FTA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한미FTA 협상 한국측 수석대표 김종훈은 “미국이 요구하는 내용이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엄밀히 따져보겠다”며 재협상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런데 한미FTA 반대 운동 진영에서도 재협상을 둘러싼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면 재협상’을 요구해 한미FTA의 독소조항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한미FTA 반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한미FTA는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대중의 삶을 파괴하는 내용 투성이이라서 재협상을 통해 일부 독소조항을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전면 재협상’ 요구는 한미FTA 협상 내용이 개선될 수도 있다는 헛된 희망을 갖게 하고, 한미FTA 반대 운동이 대중 행동 건설보다 재협상 청원에 종속되게 만들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협상 타결 때부터 ‘타결 무효’를 주장해 온 운동을 분열시킨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런 혼란과 분열을 이용해 한미FTA 체결을 강행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범국민 성명이 옳게 주장했듯이 “한미FTA는 ‘재협상’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 무효화돼야 한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신 보고서에서 “[노무현 정부의] 취약한 정치적 입지”와 “반대 여론이 35~45퍼센트로 여전히 비교적 높[은 점]” 등 때문에 “많은 분석가들이 [한미FTA의 국회] 통과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상황에서 한미FTA 반대 운동가는 누구든 재협상 가능성에 미혹되지 말고 ‘한미FTA 타결 무효와 체결 저지’를 위한 더욱 강력한 운동 건설과 확대에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한다.

강동훈

국가보안법 이용 마녀사냥의 확대를 저지하라

평화 사진작가 이시우 씨가 “국가보안법을 끌어안고 함께 죽겠다”며 무려 34일째(5월 23일 현재) 목숨을 건 단식을 계속하고 있다.

이 씨 구속은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 예술·창작·언론의 자유를 겨냥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경찰은 국제 도서전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도서 중 하나로 선정된 민통선 평화 기행에 실린 사진들, 비무장지대의 대인지뢰 사진 등 오래 전부터 공개된 이 씨의 작품이 죄다 국가 기밀 유출 또는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이 씨의 단식을 지켜만 봐야 하는 가족과 주변 지인들은 지금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

이 씨의 부인 김은옥 씨는 “제가 투표한 대통령[노무현]의 시대에, 남북으로 경의선이 오가는 시대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한다는 것이 너무도 기가 막히다”며 절규했다.

한편, 경찰은 2004년 공무원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에서 ‘주체사상을 강의했다’는 이유로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저자인 박세길 씨를 재조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2004년 11월 <조선일보>가 “공무원 노조 주체사상 교육”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박세길 씨 마녀사냥의 시동을 건 바 있다. 당시는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이 뜨겁던 터라 경찰의 조사는 흐지부지됐다. 그런데, 2년 반이 지난 지금 경찰은 다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단호함

이처럼 노무현의 공안당국은 계속 마녀사냥의 제물을 찾아 우리 운동을 공격하고 있다.

이시우 씨 부인 김은옥 씨는 “진보 운동이 이시우 씨가 저대로 죽어가는 걸 내버려 두지 말아 달라. 이시우 씨와 내가

앞장설 테니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은옥 씨는 1990년대 초 현대건설 노조 활동으로 해고된 적이 있고 최근까지 휴대폰 부품 공장에서 월 1백만 원 받고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도맡아 왔다. 김 씨는 이제 직장까지 그만두고 남편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모든 것을 바치고 있다.

진보진영은 이시우 씨와 김은옥 씨의 단호한 투쟁에서 배우고 그들의 호소에 응답해 지금부터라도 국가보안법과 마녀사냥에 반대하는 운동을 진지하게 건설해야 한다.

1987년 민주 항쟁 20돌인 지금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노무현 정부와 우익들의 수구적 퇴행 시도를 좌시해선 안 된다. 민주주의와 사회 진보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마녀사냥 반대 행동에 나서야 한다.

조승희





차베스와 21세기 사회주의

‘민중권력’의 부활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이 발전하면서 대안 사회 모델을 둘러싼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이 대안 사회 모델은 단순히 경제 체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레닌이 말했듯이, 경제의 응축적 표현은 정치이다. 또, 모름지기 진정한 대중운동은 정치세력화 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은 대안 정치 체제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이 가장 앞서 나아가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민중권력’이라는 아주 오래된 구호가 요즘 부활하고 있는 것은 시사적이다. 라틴아메리카 민중이 의회 제도보다는 민중권력이 진정한 사회 변혁에 더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민중권력은 지난해 멕시코의 오아하카 투쟁에서 현실로 나타났다. 교사 파업에서 시작한 투쟁이 격화해, 인구 3백50만 명의 주(州)에서 40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민중운동이 오아하카 시를 통제했고, 85개 단체의 대표들이 모여 오아하카민중의회(APPO)를 결성했다. 교사, 노동조합원, 사회·정치 단체, NGO, 생활협동조합, 인권단체, 학부모, 소작농, 지방자치체 등 오아하카 주민 거의 전체가 다 모인 셈이었다.

APPO는 스스로 오아하카의 최고 권위를 가진 기구로 선포하고 기존의 정치구조는 모두 정당성을 잃었다고 천명하며 정말로 혁명적인 강령을 채택했다. 11월 말 군대와 경찰에 무력 진압당하기 전까지 5개월 동안 APPO는 오아하카 시를 통제했다.

민중권력은 또 지난 3년 반 동안 볼리비아 대중운동의 특징이기도 했다. 예컨대 2005년 6월 민중항쟁 당시 라파스의 위성 도시인 엘알토에서 혁명적 민중의회를 건설해 도시를 통제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지역사회

베네수엘라에서는 대통령인 차베스 자신이 빈곤을 끝장내는 방법은 권력을 빈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민중권력의 분출”을 호소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현실의 변화는 차베스의 말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베네수엘라인들이 차베스는 좋지만 차베스 정부는 싫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물론 베네수엘라의 일부 극빈층은 사회 개혁의 혜택, 특히 보건의료와 교육 분야의 혜택을 입는다. 그러나 이런 개혁들도 대중의 빈곤과 불안정을 대폭 감소시키지는 못했다. 수도인 카라카스 인구의 절반이 여전히 노점상이나 보잘것없는 임시직 등 비공식 부문에서 힘겹게 생계를 꾸리고 있다.

반면에 부유층과 상층 중간계급은 고유가로 인한 경제 호황 덕분에 흥청망청

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베네수엘라의 주가가 치솟고 카라카스에서 값비싼 자동차들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좌파 활동가 롤란드 데니스는 이런 상황을 일컬어 “혼란”이라고 했다.

차베스를 지지하는 많은 활동가들은 이런 문제의 원인을 국가 기구와 지방 정부의 ‘관료주의’와 ‘부패’ 탓으로 돌린다. 차베스는 자신이 여전히 자본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나라에서 개혁에 적대적인 관료들이 지배하는 국가를 이용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을 적어도 반쯤은 의식하고 있다. 그래서 포고령 입법권, 통신회사·전력회사 국유화, 통합 사회주의 정당 건설, 지역 ‘자치평의회’를 바탕으로 한 민중권력 건설 등 여러 조치들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로는 지금의 혼란을 해결하기 힘들 것이다.

포고령으로 통치한다는 것은 명령이나 지시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런 명령과 지시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메커니즘 — 기존 국가 기구와 다른 — 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통합 사회주의 정당 건설 호소는 차베스를 지지하는 세 주요 정당의 출세주의, 기회주의, 권력 압투에 신물이 난 많은 활동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통합 정당도 현재 차베스 진영 내부의 모순된 태도들을 반영할 것이다.

지금 차베스 진영에는 세 정치 경향이 있다. 첫째, 자본과 상층 계급들의 특권을 더 위협하지 말고 현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쿠바식 권위주의 체제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 쿠바 정권의 실세들은 중국을 본떠 권위주의 체제와 시장을 결합시키려 하고 있는 데도 말이다. 셋째, 철저한 사회 변혁, 자본주의 파괴, 대중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혁명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경

향이 있다. 이 사뭇 다른 세 경향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한다고 해서 지금의 혼란을 극복할 수는 없다.

민중권력은 진정한 혁명이 아래로부터 진행돼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지지할 만하지만, 그 한계를 외면해서도 안 된다. 민중권력은 주로 주민 자치평의회를 강조하지만, 주민자치평의회가 아래로부터 통제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생산 현장

‘지역사회’ 자체는 하나의 사회 세력이 아니다. 한 공장의 노동자들이 모두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처럼 때때로 지역사회가 특정 계급의 지역적 분포를 나타낼 때가 있다. 그러나 대체로 지역사회 주민들은 생계를 꾸리는 방식이 서로 다르거나 심지어 정반대인 경우도 있다.

이 점은 빈민가도 마찬가지다. 빈민가에는 집단적 습성이 몸에 밴 노동자들도 있지만, 개인주의로 끌리기 쉬운 일종의 자영업자 노점상들도 있다. 실업자들도 있는 반면, 비교적 특권적 지위를 누리는 국가 공무원이나 빈민가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수 자본가들도 있다. 더욱이, 빈민가 안팎에는 흔히 긴장이 존재한다. 상하수도 문제를 둘러싸고, 또는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공터에 집을 지으려는 것 때문에, 조급이라도 더 잘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긴장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 운동은 지역 주민 전체와 유기적 연관을 맺고 있는 경우가 흔치 않다. 지역사회 운동은 때때로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대체로 소수의 운동으로 그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베네수엘라의 혁명적 과정이 진정한 아래로부터의 혁명으로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지역사회 안에서 투쟁

해야 한다. 그러나 그 강조점은 다른 곳, 즉 계급 운동에 뒤야 한다. 생산 현장의 계급 운동은 대다수 사람들을 진정한 행동으로 이끄는 능력이 대체로 지역사회 운동보다 훨씬 더 크다.

계급 운동은 또, 단지 항의뿐 아니라 사태를 통제할 수 있는 힘도 갖고 있다. 민중권력이 진정한 대항 권력으로 변모하려면 계급 조직이라는 핵심 지렛대가 있어야 한다.

거리 노점상이나 자영업자, 빈민가의 조직들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런 조직들은 집중점이 필요하다. 그런 집중점은 생산수단과 연결되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을 장악하고 변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베네수엘라의 정규직 고용 노동자들은 인구의 소수 일지라도 어느 사회 집단보다 큰 규모의 사회 집단이다. 또, 스스로 조직하고 다른 피억압 부문들도 지도할 수 있는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집단이다.

더욱이, 민중권력이 국가의 핵심부인 “무장한 자들의 기구”(군대를 가리켜 엥겔스가 한 말)에 침투하지 못하면, 즉 작업장이나 지역사회의 기층 대중과 연결된 병사들의 민주적 조직이 존재하지 않으면 민중권력은 결정적 효과가 없다. 병사들의 민주적 조직이 포함된 혁명적 민중권력은 대통령의 포고령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대통령 포고령이 혁명적 민중권력을 선동할 수 있는 계기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지만 말이다.

그러나 사회 기층민들이 상층을 통제한다는 의미에서 진정한 혁명은 위로부터의 포고령으로 실현될 수 없다. 그것은 2002~2003년과 2004년의 대중 동원 같은 아래로부터 투쟁이 분출할 때 가능하다. 그 때는 노동자 권력을 바탕으로 하는, 민중권력에 대한 혁명적 접근법이 필요할 것이다.

카라카스의 산후안 주민자치평의회 회의 — 지역사회의 서비스 개선과 권리 신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가가호호 방문 운동’의 성공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자 ‘구체적인 협상 결과에 따라 지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유보층이 51.8퍼센트나 됐다.(한국 사회여론연구소, 4월 18일)

한미FTA 반대 운동의 확대 여하에 따라 유보층을 얼마든지 반대 여론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민주노동당 중앙구위원회는 이 점에 착목해 주민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가가호호 방문 운동’을 시작했다.

‘가가호호 방문 운동’은 범진보세력 지지자, 민주노동당 지지자를 찾아내 지역에 진보 정치를 뿌리내리기 위한 중요한 도전이기도 했다.

중앙구위원회 당원들은 홍보 논리와 행동 요령 등에 관한 사전토론을 한 뒤, 용기를 내 5월 13일 처음으로 주민들의 집을 두드렸다.

“단 한 명의 지지자를 만나기 위해 문 전박대를 두려워 말자!”는 구호를 가슴에 새기며 초인종을 누르고 “민주노동당입니다. 한미FTA 체결 반대 서명을 받고 자료도 드리려고 왔는데 잠시 뵈 수 있을까요?” 하고 입을 떼기 시작했다.

‘호통치며 내쫓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가슴을 몇 번씩 쓸어내리며 노심초사한 것과 달리 주민들은 “내용이 뭔지 잘 몰라 읽어보겠다”며 열린 문 틈 사이로 유인물을 받아갔다.

당원들은 점차 두려움을 떨쳐내고 좀더 긴 대화를 나누기 위해 말을 붙이기 시작했다. 20분 동안 우리의 주장을 경청한 젊은 노동자도 만났고, 보수 정치인들에 대해 불만을 쏟아내며 먹고살기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할아버지도 만날 수 있었다.

학교와 직장에서 이미 서명했다는 민주노동당 지지자들도 찾아낼 수 있었고, 지방선거 때 민주노동당 찍었고 당사에 놀러가고 싶다며 연락처를 건네주는 주민도 만날 수 있었다. 우연히 만난 한 당원은 자신의 이웃에게 우리를 소개시켜 주기도 했다.

직접 집까지 찾아오는 노력이 가상했

아파트 단지를 돌며 주민들과 만나는 중앙구위원회 당원들(왼쪽 둘) 서울 교대 어린이날 행사에서 홍보 활동을 하는 서초구위원회 당원들(오른쪽)

는지 한미FTA에 찬성하는 주민들도 “수고하시네요”하며 친절한 인사를 아끼지 않았다.

‘가가호호 방문 운동’은 우리와 정치적 대화를 나눌 태세가 돼 있는 광범한 개혁 염원 대중을 찾아내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중앙구위원회는 이 소중한 첫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단체들과 한미FTA 저지 운동본부를 결성해 한미FTA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결집시키고 부녀회·반상회 같은 주민모임까지 찾아가는 등 주민 접촉

사업을 확대하려 한다.

(‘가가호호 방문’을 할 때 준비 사항과 선거법 대처 요령에 대한 교육 자료는 민주노동당 중앙구위원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http://jungnang.kdlp.org>)

전주현(민주노동당 서울시장

대중과 접촉할 다양한 기회와 창의적 방법을 고민하자

민주노동당 서초구위원회는 4월 25일 ‘한미FTA가 서민의 삶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노회찬 의원 초청 강연회를 열었다. 강연회에 당원과 지역 노동조합원, 지역 주민들 무려 1백여 명이 참가했다.

강연회를 준비하며 동네 곳곳에 포스터를 부착하고 집집마다 한미FTA 반대 유인물을 붙이는 활동을 벌인 덕분에 강연회에 참가한 일부 지역 주민들과 연락처를 주고받을 수 있었다.

5월 5일에는 어린이날 행사가 열린 서울교대에서 ‘광우병 쇠고기 싫어요, 전쟁 싫어요’ 행사를 진행했는데, 무려 1천 명의 어린이와 부모들이 부스를 찾아오는

것을 보고 한미FTA 반대와 전쟁 반대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소가죽 복장을 한 행사 참가자들은 아이들한테 큰 인기를 끌었다.

우리는 아이들이 버튼에 직접 구호를 쓰고 그림을 그려 달고 다니도록 했다. 아이들은 “광우병 소고기 싫어”, “젓소 아프게 하는 FTA 뻘” 등 자신들의 목소리를 버튼에 정성껏 적고는 자랑스러운 듯이 달고 다녔다.

5월 12일에는 KBS ‘전국노래자랑’ 서초구편 본선 녹화방송 장소인 서울교대 앞에서 홍보전을 진행했다. ‘전국노래자랑’ 분위기에 맞게 트로트 버전의 한미FTA 반대 노래를 크게 틀고 유인물을 나

눠줬는데, 행사장을 찾은 수많은 지역 주민들이 뜨겁게 호응했다.

이처럼 대중과 접촉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찾고, 더 큰 호응을 이끌어낼 창의적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미FTA 반대 여론을 확산하고 운동을 더 크게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한 단체들과 공동 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서초구위원회는 다양한 시민단체들과 노동조합을 폭넓게 묶어 한미FTA 반대 운동을 지역에서 더 넓고 깊게 뿌리내리게 할 작정이다.

강철구(민주노동당 서울시장 서초구위원회 조직국장)

대학의 기업화 부추길 국립대 법인화 중단하라

지난 3월 9일 노무현 정부는 ‘국립대학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 예고하고 울산대·인천대 등 5개 대학을 2010년까지 법인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특별법’은 추진 과정에서 비민주적이었다. 지난해 11월 열린 공청회는 전경 6백 명이 공청회장을 포위한 채 교육부 동원 청중만 가득 채운 관제 행사였다. 올해 초 제정된 울산국립대 법인화법은 국회법이 명시한 상정 기간, 공청회 규정조차 지키지 않았다.

이 ‘특별법’에 따르면, 대학은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 이를 위해, 이사회가 간접선거로 선출한 총장이 4년에 한 번씩 경영 성과(수익)를 평가하고 이를 재정 지원에 반영해야 한다. 1987년 항쟁의 성과인 총장 직선제와 학내 민주

주의가 부정되고, 공공성이 파괴되는 것이다. 그리 되면 등록금 인상, 부속병원 병원비 인상, 교원의 비정규직화가 불 보듯 뻔하다.

정부가 모범 사례로 꼽는 일본에서도 2004년 89개 대학이 전면 법인화한 뒤 2년 3년 사이에 등록금이 5배나 인상된 사례가 있었다. 부산대도 올해 법인화를 앞두고 등록금이 최고 26.5퍼센트나 인상됐다. 일본 대학에서는 ‘수익성’을 위해 연구비가 삭감돼 연구 환경이 나빠졌다.

교수와 직원의 신분 불안정도 심각해질 것이다. ‘수익성’을 위해 계약직 교수 숫자가 늘어날 것이고 이는 노동권·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다.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 포기과 5년 내 전출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 받게 된다.

‘특별법’은 또, 대학의 수익 사업을 허용한다. 이는 ‘대학 기업’의 설립을 허용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과 연계돼 파괴적 효과를 낼 것이다.

대학 수익을 위한 산학 연계가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는 한 제약회사가 후원한 연구에서 고혈압 약이 발작이나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원고에서 삭제됐다. 유명 섬유개발업체인 ‘마이크로 화이버스’의 고문을 맡고 있던 한 교수는 섬유공정 과정이 심각한 폐질환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발표했다가 대학에서 해고됐다.

대학 수익에 기여가 큰 기부금은 소수의 ‘명문대학’에 몰려 대학 서열화를 공고히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법인화한 89개 국립대 중 7개 대학의 기부금 총액이 전체의

54퍼센트를 차지했다.

이렇듯 국립대 법인화는 교육 공공성과 사회 공공성을 파괴한다. 그래서 해양대에서는 법인화에 반대하는 교수·학생·직원 3백 명이 시위를 벌였고, 인천대 총학생회는 총장실을 점거했다. 제주대·경북대·안동대·제주·울산·인천에서도 대학과 지역 공투위가 결성됐다.

공무원노조·교수노조·민교협 등이 참여하는 ‘국립대 공투위’는 6월 2일 대규모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이 같은 투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인 국립대 법인화를 저지하자!

안형우

(안형우는 고려대학생으로,

삼성의 대학 지배에 맞서고 학내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출교당한 투사다)

미국 이민법 “개혁”안

이주노동자 착취 강화를 위한 합법화

지난 5월 17일 미국 상원의원들과 백악관은 이민법 “개혁”안에 합의했다. 이 법안의 뼈대는 국경 경비와 밀입국자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미국 고용주들의 요구를 반영해, 불법 이민자들을 장기적으로 구제하지만 가족 이민을 제한하고 취업 이민을 확대해서 그렇게 하려는 것이다.

●국경 순찰대를 1만 8천 명까지 대폭 증원하고 국경선을 따라 약 6백 킬로미터의 담장을 추가 설치하는 등 국경 경비 강화와 불법 이민자 고용 차단 조치를 확립하고 나서 18개월 뒤에야 비로소 불법 이민자 구제나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올해 1월 1일 전에 미국에 입국한 불법 이민자들은 ‘Z비자’를 발급받을 때까지 임시 거주 허가를 얻어 합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지만, Z비자를 받으려면 5천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고, 영주권을 얻으려면 일단 출신국으로 돌아갔다가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에 들어와 8년에서 13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전에는 이민자가 출신국에 있는 가족 전체의 영주권을 신청해 미국으로 데려올 수 있었던 반면 이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

녀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취업 이민의 연간 쿼터를 지금의 14만 개에서 70만 개로 대폭 확대했지만, 이민 노동자들의 취업 경험과 숙련도, 교육 수준, 영어 능력 등을 점수로 평가해 영주권 발급 여부를 심사하므로 많은 이민 노동자들이 가족들과 헤어져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이번 이민법 개정안은 다수의 값싼 미숙련 이민 노동자들뿐 아니라 소수의 고숙련 전문직 이민 노동자들도 안정적으로 착취할 수 있기를 원하는 미국 자본가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타협책

한편, 이 개정안은 민주당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 줬다.

2005년 12월 이민 규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센센브레너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자 지난 해 봄부터 미등록 이민 노동자들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운동이 분출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5월 1일 메이테이에는 미국 전역에서 수백만 명이 이민자 방어 시위를 벌이며 “잠자는 거인이 깨어났다”고 외치기도 했다.

이런 운동의 압력과 중간선거를 앞둔 주류 정치권의 이해 타산 때문에 센센브레너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고, 상원에서 통과된 초당적 합의안도 하원에서 무산되는 등 이민법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됐다.

결국, 이민 규제 강화를 주도해 온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라틴계 유권자들의 표를 대거 잃고 민주당이 12년 만에 상하원의 다수당이 되자 이민법 개정을 주도할 수 있게 된 민주당에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러나 미국 자본주의의 이익을 우선하고 대변하는 점에서 공화당과 다르지 않은 민주당은 국민 다수의 여론(60퍼센트가 불법 이민 노동자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순순히 따르지 않고 자본가들과 기업주들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이민을 규제하고 국경 통제와 단속을 강화하는 ‘타협책’을 마련한 것이다.

불법 이민자들의 사면과 합법화는 공화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 같은 주류 정치 세력에게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봄 이후 시작된 대중적 이민자 공민권 운동이 더욱 강화되고 성장할 때 가능한 것이다.

이수현

독일 도이치텔레콤 파업과 급진좌파의 약진

유럽 최대 이동통신 회사인 독일 도이치텔레콤 노동자들이 5월 11일부터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

도이치텔레콤 경영진은 5만 명의 일자리를 외주[아웃소싱]하려 했다. 도이치텔레콤 노동자들은 이것이 본격적 구조조정의 전조 전일 수 있다고 느꼈다. 이미 지난 10년 동안 12만 명이 정리해고됐다. 파업 찬성률이 96.5퍼센트나 났을 만큼 노동자들의 분노는 대단하다.

도이치텔레콤 노동자 파업은 매우 중요한 투쟁이다. 독일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윤율을 높여 왔고, 외주는 가장 중요한 구조조정 방법 중 하나였다.

이 덕분에 독일 기업들은 몇 년 간 기록적 이익을 챙겼지만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은 꾸준히 하락했다. 만약 도이치텔레콤 노동자들이 승리한다면 독일에서 기업 구조조정에 맞선 첫번째 승리가 될 것이다.

G8 반대

이 파업은 기민련(CDU)/기사련(CSU)과 사민당(SPD)의 연립정부에 맞선 정치 투쟁의 성격도 있다. 기민련뿐 아니라 사민당도 기업 구조조정에 찬성한다.

조합원 3백만 명의 서비스노조 베르디(VERDI)의 파업 지도자인 아도 빌헬름은 파업이 2주자에 접어들었는데도 “노동자들의 분노가 여전히 자신감도 높다”고 말했다. 도이치텔레콤 노동자 투쟁은 기업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사민당의 배신이 노동자들을 급진화시키고 있음을 보여 줬다.

한편, 연립정부는 G8 정상회담 개막(6월

도이치텔레콤 파업 지지 시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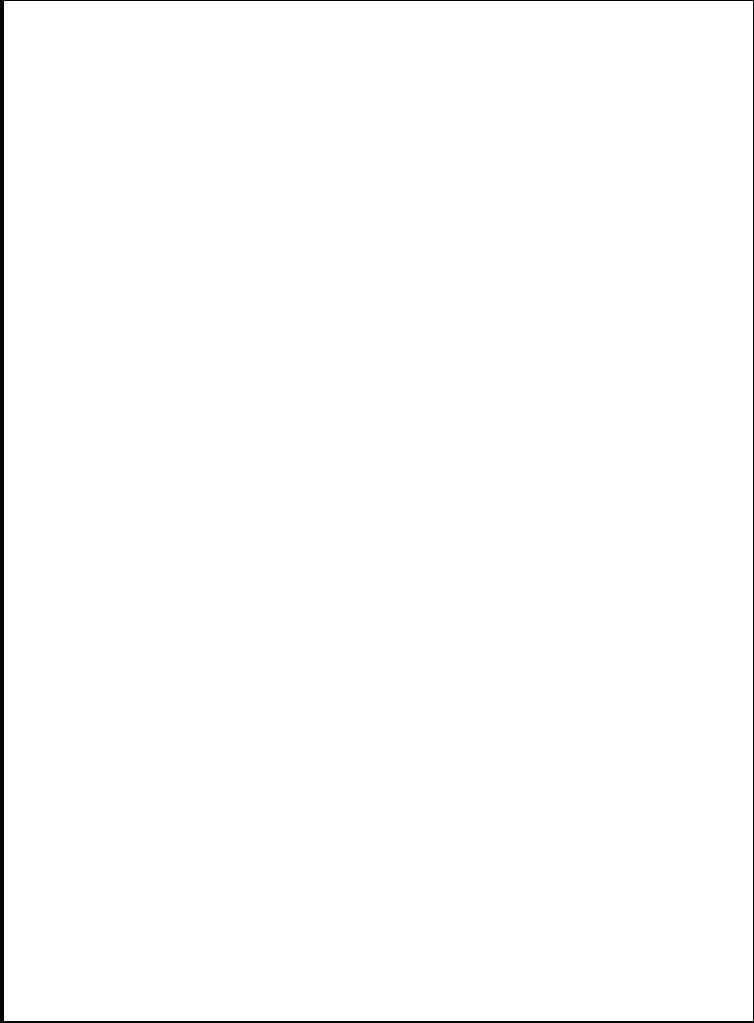
6일] 전에 파업을 종결시켜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파업 투쟁이 G8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더 광범한 사회운동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G8 반대 시위를 조직하기 위해 급진 좌파, 녹색당 청년조직, 노동조합, 교회 등을 포함하는 광범한 연합이 건설됐고 이들의 대의는 독일 대중의 지지를 얻고 있다. 한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3분의 2가 G8 반대 시위의 핵심 주장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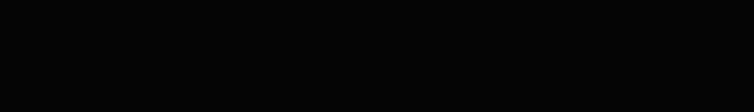
연립정부는 ‘테러리스트 색출’을 핑계로 G8 정상회담 반대 시위를 준비중인 단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일부 활동가들을 체포했다. 그러나 활동가들은 위축되지 않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에 무려 1만 명이 참가했다.

김용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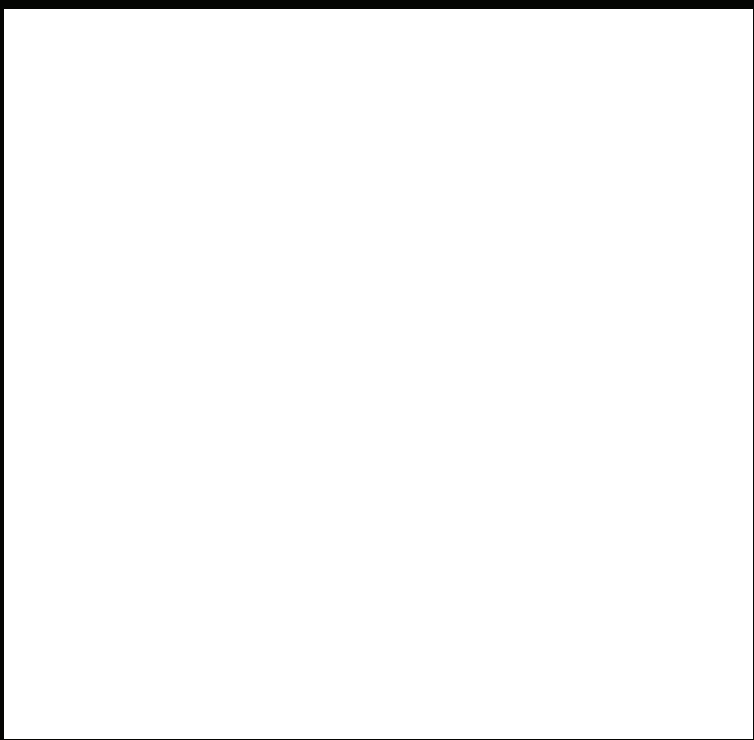
국제



5월 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이민 노동자 시위



5월 3일 일본 평화헌법 수호 시위



반가운 소식은 이런 노동자와 사회운동의 급진화를 정치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생 정당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중순에 선거대안(WASG)과 민사당(PDS)/좌파당의 대의원들이 신생 정당 ‘좌파’의 강령에 동의했다. 두 조직의 평의원 투표를 거쳐 6월 중순에는 ‘좌파’의 공식 창당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자신의 지지 기반을 배신한 사민당보다 ‘좌파’에 동질감을 더 많이 느끼는 노동조합 활동가와 반신자유주의 활동가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신자유주의에 산물 난 대중 사이에서도 ‘좌파’ 지지자들이 늘고 있다.

이 덕분에 5월 13일 브레멘 지방선거에서 ‘좌파’는 8.4퍼센트를 득표했다. 이는 ‘좌파’의 전신인 ‘선거대안’과 민사당이 옛 서독 지역에서 얻은 최고 득표율이다. 7만 당원을 가진 반신자유주의 제3당의 탄생은 대중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압력을 받은 “사민당 지도부는 2005년 11월 대연정 정부 출범 이후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데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사민당 내 좌파는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사민당 본래의 정책 목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당내 노선 투쟁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연합뉴스> 4월 30 일치) 우경화한 주류 정치 지령을 ‘좌파’가 왼쪽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것이다.

‘좌파’의 약진은 반신자유주의 정서를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정치 조직 건설이 왜 중요한지 잘 보여 준다.

김용욱

일본 개헌

군국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일본 평화운동 단체 ‘세이 피스 프로젝트’(Say Peace Project) 활동가

5월 14일 개헌 국민투표법이 가결됐다. 이 법은 공무원과 교육자의 ‘지위를 이용’한 운동을 금지하는 등 저항 운동에 대한 노골적 탄압을 포함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충분히 심의하지도 않은 채 헌법 개정을 무턱대고 강행하고 있다.

왜 지금 개헌 문제인가?

전후 일본 보수 세력이 개헌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첫번째는 1950년대 기시 정권이었고, 두번째는 1980년대 나카소네 정권이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현재 까지 이어진 세번째 개헌 책동은 보수 세력이 본격적으로 총력을 다해 시도하는 것이다.

개헌 책동이 본격화한 첫째 요인은 일본 자본의 세계화다.

패전 후 일본은 미일 안보 체제 하에서 군사적 부담을 미국에 의존했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부활한 독점자본은 국내에서는 종신고용과 연공임금[연공서열에 따른 임금 체계]을 축으로 한 일본형 기업·사회 통합으로 노동자를 분열 지배하고 ‘선진국’에서는 보기 드문 저임금으로 노동자를 착취할 수 있었다. 일본은 이런 높은 경쟁력으로 상품 수출에 전념해 고도 경제 성장을 이뤘다.

1980년대에 이런 산업 구조가 커다란 전환을 맞았다. 1985년 플라자합의에 따른 엔고를 계기로 [일본의 독점자본은] 급속히 해외로 생산 거점을 옮기게 된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일본 자본은 임금이 압도적으로 낮고 노동법제나 환경 규제도 유연한 아시아 나라들에 빠른 속도로 자본을 투자해 일본 자본의 다국적기업화를 완성한다.

국외에 투자한 자본을 지키는 것은 이제 일본 총자본에게 사활이 걸린 문제다. 그러나 이를 지키기 위해 국외에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헌법 9조였다. 그래서 1950년대와 1980년대의 개헌 책동과 달리, 1990년대 이후에는 헌법 9조를 개정하라는 강한 압력이 자본가 계급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둘째, 미국이 일본에게 군사력 부담을 요구한 것도 한 요인이다. 냉전의 붕괴는 옛 공산권과 이들의 지원을 받은 주변 국가를 통째로 자유 시장에 편입시켰다. 수십억 명이 사는 지역에서 세계화 때문에 계급 대립이 격화할 것이므로 이들 지역을 정치적으로 안정시키는 문제가 다국적 자본과 ‘선진국’의 공통된 이해가 된다. 미국은 냉전 시대 봉쇄 전략에서 ‘시장과 민주주의의 유지·확대’ 전략으로 방향을 돌리고 일본에 그 부담을 일부 요구한 것이다.

다국적기업화

헌법 9조가 개헌 문제의 초점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만 보면 개헌 책동의 근본 문제를 못 볼 수 있다.

자민당이 2005년에 작성한 새 헌법초안(2005년 작성) 전문은 이렇게 주장한다. ‘일본 국민은, 귀속하는 나라나 사회에 애정과 책임감과 기개를 갖고 스스로 지킬 책무를 공유한다.’ 그리고 제12조에 ‘국민의 책무’라는 제목을 붙이고 ‘국민은 이것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자유와 권리에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을 자각하고, 항상 공익과 공공의 질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자유를 누리고, 권리를 행사하는 책무를

김송 일본 평화운동 단체 ‘세이 피스 프로젝트’(Say Peace Project) 활동가

해상자위대를 사열하는 아베

진다’며 권리와 의무를 결합해 냈다. 근대 헌법은 인민의 권리를 위해 인민이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제한 규범이다. 따라서 헌법에 ‘국민의 책무’가 쓰여 있다면 근대적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가에 협력해야 할 국민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아닌 헌법을 제정하려 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신자유주의 ‘개혁’은 고이즈미 시대부터 본격화했지만,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등 권리의 기초를 규정하는[헌법] 헌법은 한후 신자유주의를 더한층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된다. 전쟁이나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노동자·민중을 탄압하는 데도 [헌법] 일본 헌법이 장애가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개헌 반대 운동의 과제

일본 좌파들은 대부분 개헌 문제에 대단히 관심이 많아 ‘헌법을 지켜라’ 하고 외친다. 그러나 운동 속에 청년층이 너무 적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효과적으로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정세 인식이 너무나 일국적이기 때문이다. 세계화 시대에 일본이 벌이는 전쟁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일본 자본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좋은 조건의 국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가난한 주변국이나 지역분쟁에 개입하는 경찰 전쟁이다. 이것은 방위 전쟁도 아닐뿐더러 제국주의 간 전쟁도 아니다. 따라서 일본 제국주의에 무비판적인 많은 일본 좌파가 주장하는 ‘미국의 전쟁에 말려든다’는 논리는 노동자·민중(특히 젊은 이)에게 설득력이 없다.

또, 많은 일본 좌파가 [일본] 제국주의에 무비판적인 것은 그들의 역사 인식 결여 때문이기도 한

다. 일본의 근대화는 대만이나 조선을 비롯한 식민지 지배에서 시작됐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 제국주의 전쟁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일본에서 전쟁의 이미지는 히로시마·나가사키로 상징되는 피해자 측면이 주되고 [일본 제국주의가] 침략 전쟁이나 식민지 지배를 했다는 가해자 측면은 일반적으로 잊혀져 있다. 원래 헌법 9조 자체는 [미국이] 냉전 체제에서 일본을 반공(反共)의 성채로 만들기 위해 천황을 면책하고 천황제를 온존하려고 미국이 제안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좌파도 1990년대까지 전후보상 운동에 완전히 소홀했으며 현재도 배외주의에 대한 비판이 지금도 약하다. 일본의 노동자·민중이 내면화하고 있는 배외주의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연대를 구축하는 데서 역사 인식 왜곡에 반대하는 투쟁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둘째, 청년들을 조직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주제 문제가 있다. 평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40대 이상이며 청년층은 유감스럽게도 거의 없고 가끔 있어도 조직되지 않았다.

그것은 일본의 청년들이 신자유주의에 의해 가장 억압받고 분열 지배되고 있는 사회집단이라는 것과 관련 있다. 일본은 다른 선진국보다 10년 늦게 신자유주의 개혁을 시작했다. 또한 1990년대 후반부터, 특히 2000년 이후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그 결과 신자유주의로 인한 피해를 30대 이하의 젊은 세대가 더 많이 받고 있으며 이것이 운동에서 세대 간 분열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이 젊은 세대와 연대하기 위해서는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 그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 조직화 전략을 가다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40대 이상의 구세대는 자신들이 젊었을 당시의 이론이나 투쟁 형태를 무비판적으로 되풀이할 뿐, 새로운 투쟁 방법을 모색하려는 노력도 그다지 하지 않는 듯하다. 게다가 새로운 사회를 어떻게 지향할 것인지 하는 물음에 많은 일본 좌파가 침묵한 채 헌법 문제와 그것을 결합하려 하지도 않는다.

개헌에 반대하는 효과적인 투쟁은 분열된 젊은층을 조직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 구래의 평화 운동에 환멸을 느끼고 고립·분열돼 있는 그들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그들 자신이 서로 자유롭게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장을 운동이 어떻게 잘 만들 수 있느냐가 쟁점다. 따라서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하고 헌법 문제가 사회 변혁과 어떻게 결합돼 있는 가라는 물음에 회피하지 않고 대담해야 한다.

번역 최미선

중국 강압적 국가 정책에 분노한 농민

5월 18일 중국 남부 광시(廣西) 성(省) 보바이(博白) 현(縣) 몇몇 마을에서 농촌 주민 수만 명이 정부의 강제 인구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목격자에 따르면, 샤파(沙派) 진(鎭)에서는 2만 명 이상이 지방 정부 청사를 습격했다고 한다.

중국 정부는 1979년 이래 산아제한 정책, 이른바 ‘1가구 1자녀’ 정책을 펴 왔다. 그러나 부자들은 벌금을 물고 다수의 자녀들을 낳은 반면 가난한 사람들만 피해를 입었다.

지방 관리들은 중앙 정부가 정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강제로 정관수술을 시키거나 심지어 임신한 여성을 납치해서 강제 임신중절 수술을 하기도 한다. 벌금을 부과한다는 핑계로 주

민들의 물건을 강탈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번 소요가 발생한 지역의 지방 정부는 산아제한 규정을 어긴 주민들에게 도합 1만 위안(약 1백30만 원)의 벌금을 물리려 했다. 지역민 1인의 평균 연소득이 1천 위안에 불과한데 말이다!

이런 억압은 많은 대중의 분노를 자아냈고, 1990년대 중반 이래 중국에서 ‘군체성 사건’[집단 시위] 발생 숫자는 빠르게 늘어 왔다. 2005년에는 무려 8만 7천 건이 발생했다. 이중 농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그들은 1920년대 이래 가장 전투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다.

김용욱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을 재촉할 제주 해군기지

정부가 제주도에 8천억 원을 들여 해군 기지를 건설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제주도 해군기지를 앞으로 창설될 전략기동함대의 전진 기지로 삼으려 한다. 기존의 연안 방어에서 벗어나 ‘대양 해군’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이 전략기동함대는 인도양-말라카 해협까지 진출해 작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인도양-말라카 해협은 전략적 요충지이다. 중국·한국·일본 등 동아시아 주요 공업국들의 석유 공급로가 이곳을 통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유기업원 부원장 이춘근은 “페르시아 만에서부터 울산·광양까지 꼬리를 물고 달려오는 유조선과 우리 국민이 먹고사는 식량을 실어나르는 화물선, 그리고 이들이 이용하는 해로(海路)의 안보를 확보해야만 한다”며 해군력 증강을 역설했다.

실제 중국·일본·한국은 이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해군력 증강에 매달려 왔다.

일찌감치 일본은 미국과 공동으로 이 지스함을 이 지역에 파견한 바 있다. 최근에는 호주와 군사 협력을 강화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

이에 대응해 중국도 이 지역 통제권을 둘러싼 경쟁에 뛰어들었다. 중국 지배자들은 1996년 대만 해협 위기를 겪고 나서 해군을 급속하게 증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중국의 2004년 국방백서는 해군 현대화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그 결과 1990년대 10여 척뿐이었던 구축함이 2005년에는 21척으로 늘어났고 핵잠수함 전력도 증강됐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항공모함도 건조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해군은 2020년까지 필리핀해와 인도네시아 해역까지 통제권을 넓히고, 2050년에는 괌까지 작전 범위를 확대하

려 한다. 중국 지배자들의 다수는 아직 미국과의 전면적 충돌을 바라지 않지만,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은 미일 동맹과의 긴장을 더 높일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KDX-1·2 사업으로 신형 구축함 9척을 실전 배치했고 잠수함 전력도 크게 늘렸다. 게다가 5월 25일 진수할 KDX-3 구축함은 서방 최대의 이지스 구축함이다. 이 구축함은 전략기동함대의 핵심이 될 것이다.

그래서 중국도 한국의 해군 증강을 경계했다. 지난해 11월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한국 해군의 흥기가 서태평양에

대형 군함이 운집하는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만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제주도가 갑자기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게다가, 제주도 해군기지는 팽택 미군 기지처럼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데 쓰일 수도 있다. 이 해군기지는 미국의 핵잠수함과 항공모함, 이지스 구축함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제주도 해군기지가 미국이 추진하는 MD(미사일방어) 체제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국방부는 계속 부인하지만 제주도 해군기지에 배치될 한국 이지스함은 언제든지 미국 주도의 해상 MD 체제로 전환 가능하다.

또, 제주도 해군기지는 단순한 해군기지가 아니다. 최근 노회찬 의원은 이 해군

기지에 공군 전투기 대대까지 배치될 것이라고 폭로했다. 그리 되면 제주도 해군기지는 복합 군사 기지가 될 것이고, 한반도 내 미군이 경우에 따라 제주도 군사 기지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3월 당시 미국 태평양사령관이던 윌리엄 펠런은 “중국 군사력의 현대화”를 들어 “한미동맹도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점에서 제주도 해군기지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위험한 군사 전략에 휘말릴 수 있다.

따라서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은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을 재촉할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에도 반대해야 한다.

한규한

소말리아 해역 한국 어선 납치의 배경

지난 5월 15일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한국 원양어선 2척이 납치됐다. 이 어선에는 한국인 4명을 포함해 20여 명의 선원들이 타고 있었다.

이 지역에서 한국 어선이 납치된 것은 지난해 4월에 이어 두번째다. 지난해에는 한국인 선원 4명이 타고 있던 동원호가 납치돼 1백17일 만에 풀려났다.

이 지역에서 선박 납치가 빈번한 이유를 알려면 소말리아의 비극적 역사를 볼 필요가 있다.

1960년 독립 이후에도 소말리아의 정치와 사회는 안정되지 않았다. 1969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1970년대 말에는 에티오피아와 전쟁을 치렀다.

이런 불안정 뒤에는 미국과 소련의 제국주의 경쟁(냉전)이 있었다. 소말리아 군부 정권은 처음에 소련의 지원을 받았으나 나

중에는 미국의 후원을 받아 에티오피아의 친소 정부와 전쟁을 벌였다. 이 전쟁의 패배 여파로 정부군과 반정부군 사이에 내전이 시작됐고, 군대는 군벌들로 쪼개져 서로 싸웠다.

미국 정부는 1992년에 소말리아 상황을 안정시킨다는 핑계로 침략군을 보냈다. 그러나 침략군은 소말리아인들의 저항에 부딪혀 쫓겨났다. 그 뒤 2006년 이슬람법정연합(UIC)이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할 때까지 내전이 계속됐다.

“비인도적 행위”

오랜 전쟁과 내전의 결과 소말리아는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가 됐다. 내전 과정에서만 30만 명 이상이 기아로 사망했고 6백만 명 이상이 난민으로

전쟁과 빈곤이 낳은 비극

전락했다. 전쟁과 가난에 지친 많은 소말리아인들은 UIC가 안정을 가져다 주기를 바랐다.

UIC 의용군은 대중의 진정한 지지가 있었기에 군벌들을 몰아내고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1월 미국의 후원을 받은 에티오피아 군대의 침략으로 소말리아인들의 소박한 바람은 산산조각났다.

평범한 소말리아인들은 에티오피아 군대의 후원을 받는 현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 에티오피아 군대는 점령에 맞선 소말리아 저항세력을 공격하며 무고한 민간인들을 무차별 학살하고 있다.

겨우 석 달 동안 40만 명 이상이 난민이 됐다.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최대 규모이다. 유엔구호처 대변인은 소말리아 정부와 에티오피아 군대가 구호물자 공급을 방해하

고 있다고 폭로했다.

바로 이런 절망적 상황 때문에 소말리아에서는 납치와 약탈이 생계 유지 수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동원호 납치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납치를 “비인도적 행위”로 비난했다. 선원들은 당장 풀려나야 한다. 그러나 1993년 서방 제국주의의 소말리아 침략을 도와 군부대(공병대)를 파견한 적이 있는 한국 정부는 납치 단체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 당시 미군은 소말리아인 1천여 명을 학살했다.

무고한 선원들이 납치되는 비극을 멈추려면 소말리아가 안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미국 정부가 제국주의 간섭을 중단하고 에티오피아 군대가 즉각 철군해야 한다.

김용욱



존 몰리뉴의 실천가들을 위한 맑스주의 입문

연속혁명론

[편집자] 오늘날 각각 반제국주의 투쟁과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최전선인 중동과 라틴아메리카에 사는 혁명이 당면 투쟁 일정에 올라 있다. 트로츠키의 연속혁명론은 중동과 라틴아메리카처럼 노동계급이 인구의 소수인 곳에서도 그들이 정치적으로 잘 조직돼 있다면 노동계급이 이끄는 혁명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맑스주의는 자본주의의 변화와 계급투쟁의 발전에 계속 조응해야 하는, 살아 움직이며 발전하는 이론이다. 트로츠키의 연속혁명론은 맑스 사후 맑스주의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여 가운데 하나다. 연속혁명론은 20세기를 통틀어 맑스주의에 기여한 가장 독창적이고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로서 그 함의는 아주 광범하다.

불행히도, 연속혁명론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장애물은 바로 그 이름이다. 당연히 사람들이 ‘연속(permanent) 혁명’이라는 말을 처음 들을 때 드는 생각은 혁명이 끝없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이다. 이 말은 혁명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흥미진진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끝없이 영원히 계속되는 혁명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맑스주의에도 어긋난다. 왜냐하면 인간사에서 폭력과 충돌을 없애는 것이 맑스주의의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이다.

프랑스 대혁명

사실, ‘연속’ 혁명은 맑스주의의 역사에 등장하는 다른 용어들, 예컨대 볼셰비즘이나 멘셰비즘과 마찬가지로 우연히 붙은 별명일 뿐이다. 그리고 연속혁명론의 기본 사상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파악하기 전까지는 그 별명조차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 역사적 맥락은 무엇보다 20세기 초 제정 러시아였다. 당시 러시아는 유럽에서 경제적·사회적·정치적으로 가장 후진적인 사회였다. 인구의 대다수는 17세기 서유럽에 비길 만한 조건에서 일하며 살아가던 농민들이었다. 영국에서 농노제가 사라진 지 4백 년도 더 지난 1861년에야 비로소 러시아에서 농노제가 폐지됐다. 러시아의 지배계급은 여전히 귀족 지주들이었다. 근대적 공업과 근대 공업의 산물인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가 도시들, 특히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에서 이제 갓 발전하기 시작했지만, 농업이 여전히 우세했다. 민주주의나 표현의 자유도 없었다. 정치 권력은 황제인 짜르의 손에 집중돼 있었고 짜르의 지배는 절대적이었다. 다시 말해, 당시 러시아의 상황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전의 프랑스와 견줄 만했다.

러시아의 신흥 맑스주의 운동이 직면한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맑스주의자들

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한 가지 점에서 그들은 모두 일치했다. 러시아가 짜르 왕정을 전복할 혁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맑스주의자들은 그런 혁명이 일어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차이는 다가오는 이 혁명의 정확한 성격과 동역학, 따라서 혁명 속에서 맑스주의자들이 해야 할 전략적 구실에 대한 것이었다. 이런 차이는 1905년 혁명의 여파로 전면에 부각됐고, 여기서 세 가지 태도가 분명해졌다.

트로츠키

첫째는 플레하노프와 멘셰비키의 태도였다. 그들은 러시아 혁명이 부르주아지가 지도하는 부르주아 혁명일 것이고 그 결과는 부르주아지가 지배계급인 부르주아 민주주의 사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맑스주의자들의 과제는 이 과정을 지원하면서 그 속에서 노동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다.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은 그 뒤의 일이다.

둘째는 레닌과 볼셰비키의 태도였다. 그들은 혁명의 근본 성격이 부르주아 혁명이라는 점, 즉 혁명의 결과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사회이지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러시아 부르주아지는 너무 보수적이고 소심해서 자신을 위한 혁명을 스스로 이끌 수 없다. 노동계급이 농민과 동맹해서 민주주의 혁명을 지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레온 트로츠키가 발전시킨 연속혁명론이었다. 트로츠키는 부르주아지가 아니라 노동계급이 혁명을 지도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레닌과 견해가 같았다. 그러나 혁명 과정에서 노동계급은 권력을 장악하고 사회주의로의 전환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러시아 혁명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갈 것이다. (‘연속 혁명’이라는 말은 1850년에 맑스가 독일 혁명에 대해 비슷한 태도를 표명하며 사용한 구호에서 따왔다.)

러시아 인구의 대다수가 농민인 데다 경제의 저발전으로 인한 후진성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사회주의 생산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중대한 반론이 제기되자 트로츠키는 러시아를 따로 떼어놓고 보면 그 말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러시아 혁명을 국제 혁명의 첫 단계로 이해해야 하고 국제적으로 사회주의를 위한 조건이 무르익었다고 반박했다.

1917년의 실제 러시아 혁명은 트로츠키의 전망이 옳았음을 입증했다. 혁명은 짜르를 타도한 2월 반란으로 시작됐다. 2월 반란은 노동자들 자신의 자생적 행동이었다. 혁명의 부르주아적 성격에 집착한 멘셰비키는 처음에는 노동계급을 억제하려고 애쓰는 보수적 세력이 되더니 나중에는 10월 혁명에 반대하는 노골적인 반(反)혁명 세력으로 전락했다. 볼셰비키의 어중간한 태도는 사태 전개, 특히 노동자 권력의 맹아로서 소비에트(노동

자 평의회)가 등장하고 망명지에서 러시아로 돌아온 레닌이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요구를 바탕으로 한 노동자 혁명의 전망으로 볼셰비키당을 급속히 설복하자 사라지고 말았다. 이로써 레닌은 사실상 트로츠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편으로 트로츠키는 볼셰비키당에 가입하고 레닌과 함께 10월 혁명에서 노동계급이 권력을 장악하도록 이끌었다.

소비에트

연속혁명론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해 부정적으로 입증되기도 했다. 러시아 혁명이 국제적으로 혁명의 물결을 고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 혁명이 패배하자 러시아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없게 됐고 스탈린주의 반동이 득세할 수 있었다.

스탈린주의는 연속혁명론을 트로츠키주의 이단으로 비난하고 멘셰비키 단계론으로 되돌아가, 처음에는 1920년대의 중국 혁명에서 나중에는 민주주의 투쟁이나 민족 독립 투쟁이 벌어지는 나라 모두에서 부르주아지와 동맹을 추구했다. 이에 대해 트로츠키는 연속혁명론을 일반화해 러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도 적용했다.

이 점은 맑스주의에서 엄청나게 중요했다. 맑스가 노동계급이 사회주의의 주체라고 주장(맑스주의의 핵심 명제)한 것 때문에 많은 자칭 맑스주의자들이 사회주의는 노동계급이 인구의 다수인 선진 공업국들, 특히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나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반면에 트로츠키는 노동계급이 인구의 소수인 나라에서도 노동계급은 농민과 동맹해서 그리고 국제 혁명의 첫 단계로서 권력을 장악할 수 있고 장악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사회주의 혁명 프로그램을 정말로 세계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심지어 봉건제가 사라지고 부르주아지가 거의 모든 곳을 지배하는 오늘날에도 기본적 민주주의나 민족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곳은 어디나 연속혁명론이 여전히 현실 관련성이 있고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런 상황에서 (자유주의자들·개량주의자들·민족주의자들·스탈린주의자들 등은) 항상 당면 투쟁의 ‘단결’을 위해 사회주의를 제쳐 두라고, 심지어 노동계급의 기본적 권리조차 제쳐 두라고 맑스주의자들에게 압력을 가한다.

연속혁명론은 맑스주의자들과 노동자 운동이 민주적·민족적 요구를 위한 투쟁을 지도함으로써 그런 당면 투쟁을 강화함과 동시에 그런 투쟁을 노동자 권력과 국제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일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보여 준다.

존 몰리뉴는 《마르크스주의와 당》(북막스),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책갈피),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책갈피)의 저자다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아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중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돼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점상과 철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강성철 동지와 한국노총 점거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5월 18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전해투 소속 투사인 강성철 동지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강성철 동지는 지난해 9월 한국노총 이용득 지도부의 9·11 ‘노사관계로드맵’ 아합에 항의해 7명의 전해투 동료들과 함께 한국노총 부위원장실을 점거했다가 구속됐다.

재판부(재판장 김동하)는 강성철 동지를 방화 예비 주범으로 몰아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이미 재판부는 그를 제외한 7명의 점거농성자 모두에게 징역 8개월~1년 4개월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성철 동지의 기물 파손 혐의 등이 무죄임은 인정했다. 사실, 문을 해머로 부수고 기물을 파손한 것은 한국노총 간부들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국노총 이용득 지도부의 위신을 세워 주기 위해 억지 논리를 폈다. 점거농성자들이 경찰의 폭력 연행을 예방하기 위해 방어 목적에서 준비한 신나를 증거 삼아 계획적으

로 방화를 하려 했다고 왜곡한 것이다.

어처구니없는 중형 선고에 재판을 방청했던 동료들은 분노했다. 구속노동자 후원회 이광렬 사무국장은 판결에 항의해 “재판 똑바로 하라”고 한마디 했다가 즉결 감치 처분을 받고 사흘 동안 구속당하기도 했다. 재판부의 권위주의적이고 몰상식한 행태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가 보여 준 것

5월 19일 전국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는 재적 3백34명 중 1백73명이 참가해 가까스로 성사됐다.

공무원노조가 그동안 대의원대회도 못 열 만큼 위기를 겪은 것은 무엇보다 노무현 정부의 무지막지한 탄압 때문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사무실 폐쇄, 조합비 자동이체 차단 등 온갖 야비한 방법으로 공무원노조를 탄압해 왔다.

이런 탄압에 굴복해 특별법 내 노조로 들어가자는 ‘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도 문제였다. 통추위는 법 내 노조로 가기 위한 지부별 조합원 투표를 추진하는 등 조직 분열 행위를 해 왔다. 따라서 법외 노조 사수로 조합원이 감소했다는 통추위의 주장은 적반하장 격이다.

통추위는 이번 대의원대회 때도 대의원들의 참여를 방해하는가 하면, 대의원대회 전날 통추위 소속 5개 본부장이 무더기로 임원 사퇴를 하기도 했다. 통추위의 행동은 그들이 구조조정

저지와 공무원 노동자 단결보다 법내 진입과 지도권 장악에만 관심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정부의 탄압과 퇴출제 등 구조조정에 맞서 단결 투쟁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또, 이런 투쟁 속에서 왜 노동3권이 필요한지를 입증해야 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이런 투쟁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지도부가 좌충우돌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노조 내부의 혼란과 분열은 커져 왔다.

결국 통추위와 거듭 타협해 온 지도부는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공무원노조법 독소조항 개정 및 해고자 문제 해결을 위해 교섭과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그 결과에 대한 승인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7월 중 실시하고 그에 따라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지도부 총사퇴를 포함한 조직 진로를 결정”하자는 안을 제출했다.

배신자 이용득을 규탄했던 점거농성자들

지금 한국노총 지도부가 아합한 노동법 개악의 결과로 곳곳에서 비정규직화와 무더기 해고가 벌어지고 있다.

노동자들을 배신한 한국노총 지도부에 맞선 강성철 동지와 전해투 동지들의 항의는 정당했다. 강성철 동지를 비롯한 8명의 구속노동자를 석방하라!

김태규

교섭 성사를 위한 집중 투쟁을 말하고는 있지만, 투쟁 요구는 사실상 노동2권으로 축소됐다. 법외 노조를 계속 고수하기는 역부족이지만 현재의 특별법을 그대로 받아들이 수도 없다는 대의원들의 정서 속에 이 안은 통과됐다.

그러나 정부는 “법외 노조와는 어떠한 대화도 없다”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고, 통추위는 이 정도 후퇴는 부족하다며 공무원노조 탈퇴를 선동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은 현장에서부터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과 연대를 건설하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마포구지부에 이어서 강원본부도 투쟁으로 퇴출제를 유보시킨 사례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물론 연금 개악과 퇴출제 등에 맞서는 효과적인 투쟁을 위해서도 특별법 거부도 여전히 필요하다.

신미정·전지윤

대학 맑스주의 포럼

충남대

신자유주의의 대안은 있는가
일시: 5월 29일(화) 6시30분
문의: 011-9097-0420

이화여대

자유무역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까
연사: 이정구(경상대학 경제학과 강사, 한미FTA 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팀 활동)
일시: 5월 30일(수) 6시30분
문의: 010-6890-8796

부산대

1987년 20주년 - 민주주의 시계는 어디쯤 왔는가
연사: 한규한(주한 〈맞불〉기자)
일시: 5월 31일(목) 6시30분
문의: 010-4569-0501

‘다함께’에 가입 하십시오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
비정규직화와 한미FTA에 반대하십니까? ☐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시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합시다.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 백은진



정기구독 하십시오

☐ 6개월 / 2만5천 원
(신문값 20,000원 + 우송료 5,000원)

☐ 1년 / 5만 원
(신문값 40,000원 + 우송료 10,000원)

신문 증원으로 정기구독 요금이 다소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정기구독자는 구독 기간 만료일까지 인상된 요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ader@counterfire.or.kr 전화: 02-2271-2395

계좌번호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백은진

(‘다함께’지역조직자 최영준)

비정규직 악법과 한미FTA에 맞선

파업을 지지하라

비정규직 악법 시행령이 더한층 개악된
내용으로 5월 17일 최종 확정됐다.

4월 19일 입법 예고 당시 16개이던 기간
제 예외 직종(기간제로 2년 이상 근무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직종)이 10개
나 더 늘었다.

파견 허용 업무도 기존 1백38개이던 것
을 입법 예고에서는 1백87개로 확대하더
니, 이번에 또다시 10개를 추가해 총 1백97
개로 늘렸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김성희 소장은 “비
정규직법이 사용자들에게 비정규직을 자유
롭게 쓰라고 만들어졌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시행령을 평가했다.

시행령 개악 과정은, ‘악법 폐기’에서 ‘악
법 재개정’으로 후퇴하며 노사정협의를 참
여해 시행령을 개선하려던 민주노총 지도
부의 전술이 잘못이었음도 보여 준다.

악법 시행도 전에 이미 곳곳에서 비정규직
해고와 탄압이 자행돼 왔다. 더구나 이런 공격
은 단지 비정규직에 그치지 않는다. ‘공무원 퇴
출제’, ‘교원평가제’, ‘철도공사의 ERP(전사적
자원 관리) 제도’ 등은 공공부문부터 시작되는
정규직 고용 불안을 보여 준다.

결국 “조직력이 취약한 비정규직을 먼저
공격해 정규직을 포위하고, 비정규직 처지
악화로 ‘고용 안정’ 개념이 무너진 틈을 타
정규직까지 제압하려는” 것이 저들의 의도
다.(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오민규 집

행위원장)

그러나 노동자들의 저항도 거세다. 비정
규직 무더기 해고 등의 공격이 투쟁을 촉발
하고 있다. 기업주들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
출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곳곳에서 노동
조합 건설로 반격하고 있다. 전국비정규직
노조연대회의에 따르면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에서 노동조합의 깃발이 솟아
오르고 있다.”

최근 벌어진 몇몇 투쟁의 승리도 새로운 가
능성을 보여 준다. 연초 GM대우 부평공장 비
정규직 노동자들이 승리한 데 이어 울산과학
대 청소 비정규직들의 투쟁도 승리했다.

기아차 비정규지회는 화성공장 생산라인
을 모두 세우는 효과적인 파업으로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다.

정규직 노조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최근 현대차 아산
공장 사내하청지회도 쟁의 행위를 결의하
고 나섰다.

노동3권을 요구하며 싸워 온 타워크레인
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파업을 앞
두고 있다.

이제부터는 이런 투쟁을 한데 모아 힘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투쟁 효과
를 높이기 위해 정규직 노조가 연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기아차에서 정규직 노조가

대체인력 투입을 묵인했다면 비정규직의
파업은 실패했을 것이다.

비정규직 악법 폐기 투쟁은 한미FTA 반
대 투쟁과 연결돼야 한다. 한미FTA는 “비
정규직을 확산하고, 구조조정 압력과 사회
양극화를 촉진하여 노동기본권 행사를 근
본적으로 제한”하는 협정이기 때문이다.

이미 한미FTA 반대 투쟁 분위기도 달궂
지기 시작했다. 금속노조의 6월 말 파업 결
의에 이어 공공서비스노조도 ‘총파업을 포
함한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한미FTA 체결 저지를 중심으로 하는 6월
말 범국민적인 총력 투쟁 전선 구축”을 결
정했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도 이 시
기에 집중 투쟁 계획을 세웠다. 물론 노동
조합 상층 지도자의 행동은 그 말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가 태반이다. 따라서 현장 활동
가들과 노동자들의 구실이 매우 중요하다.

이 모든 투쟁을 실제로 조직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동자들의 파업이
대규모로 벌어지고, 청년 학생들이 광범하
게 참여하는 대규모 운동이 벌어진다면 한
미FTA와 정부의 신자유주의 공세를 주춤
거리게 만들 수 있다. 기업과 투자가의 이윤
이 아니라, 노동자와 피억압 민중의 삶이 우
선하는 세상을 위한 이 투쟁에 모든 힘을 집
중하자!

정종남

부산지하철 노동자 파업의 값진 승리

지하철 상업화와 구조조정에 맞선
부산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이 통쾌
한 승리를 거뒀다.

부산지하철 노동자들은 1998년
이후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에 시달려 왔다.

부산지하철은 1킬로미터당 운
영인원 37.6명으로, 서울지하철의
75.6명, 인천지하철의 52.1명에 비
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신규 노선인 양산선 개통
에 따른 신규 인력 충원은 부산지하
철 노동자들의 절실한 염원이었다.

그러나 부산교통공사는 양산선 개
통 이후 신규 인력 충원 대신 기존 인
력을 전환 배치하는 수작을 부렸다.
또, 매년 46억 원의 재정적자를 이유
로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려 했다. 그
러나 몇 년째 불만을 참아 온 지하철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역사상 처음으로
4개 지부 공동 순회 투쟁과 농성,
공동 파업으로 강력하게 대응했다.

비바람에 농성 천막이 무너지고,
폭우가 쏟아지는 악천후에도 2천8
백 명의 조합원 가운데 2천2백 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파업에 참가한 지하철 노동자는
“우리는 요금인상과 인력감축으로
적자를 메우려는 수익성 논리에 반
대한다.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하며 투쟁 의지를 다졌다.

부산지하철 노동자들의 높은 사기
와 단결된 파업은 “인력 충원은 절대
없다”며 오만한 태도를 보여 온 교통
공사가 “57명 신규 인력 확충과 비
정규직에 대한 시급과 휴가일수 확
대, 2007년 성과급 보장”이라는 실
질적 양보를 하게 만들었다.

부산지하철 노동자들은 2004년
파업 실패 후 처음으로 공사의 인력
감축 정책에 제동을 걸었고, 지하철
상업화에 맞서 값진 승리를 얻어냈
다.

이것은 6월 ‘한미FTA 반대, 비정
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투쟁을 준비
하는 노동자들에게 고무적인 소식이
될 것이다.

박수원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서구위원회 사무국장)

‘다함께’가 주최하는 여름 진보 포럼

전쟁과 혁명의 시대

2007

7월 14일(토) – 7월 17일(화) | 주최 : 다함께

참가 신청 및 문의 Tel_02-2271-2395



→ 주요 연사

린지 저먼 영국 리스펙트 런던 시장 후보 / 영국 전쟁저지연합 사무총장
존 리즈 영국 리스펙트 사무총장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 후보 / 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노회찬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 후보 / 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 후보 / 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다함께’가 주최하는 여름 진보포럼 “전쟁과 혁명의 시대”가 올해로 8회째
를 맞이합니다. 매년 1천 5백여 명의 학생, 노동자, 청년, 청소년들이 등록한
한국 최대의 진보포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